

수신: 각 언론사 정치, 사회부
날짜: 2024년 6월 4일(화)

문의: 전국민중행동 (전국민중행동 사무국장 심규협 010-5102-4722)

22대 국회개원에 즈음한 기자회견

“국민의 명령이다”

거부된 민생개혁입법 일괄 상정·의결 국회는 응답하라!

- 일시 : 2024년 6월 4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 주최 : 전국민중행동,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

1. 취지와 목적

- 21대 국회는 역대 어느 국회보다 일하지 않은 국회였습니다. 2만 7,000여건 발의중 처리한 안건은 9,500여건으로 법안 통과율은 35.3%입니다. 수많은 민생개혁입법안이 거부권 통치로 일관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거수기로 전략한 국민의힘으로 인해 대부분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압도적 심판으로 시작하는 이번 22대 국회는 달라야 합니다.
- 국민들은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심판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거부된 민생개혁입법안들을 모두 일괄 상정, 의결해야 합니다. 양곡관리법, 노조법 2,3조 개정, 채상병 특검, 방송 3법, 쌍특검법과 보건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입니다.
- 더욱이 윤석열 정권의 부자감세로 세수 결손이 56조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회복지예산, 지방교부세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위기로 삶의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 농민 서민들은 더더욱 위기속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증세 중단, 민생지원금 등 민생 지원확대, 사회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개혁입법 추진에 속도감을 높여야 합니다.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아 지금 당장 민생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 이에 전국민중행동과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에서는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 정권을 국민이 거부한다. 윤석열 정권은 퇴진하라, 민생개혁입법을 일괄 상정,의결하라는 요구로 6월 4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 규모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합니다. 윤석열 정권에 거부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번 기자회견에 귀사의 언론보도를 요청합니다.

2. 개요

- 제목 :22대 국회개원에 즈음한 기자회견 “국민의 명령이다”거부된 민생개혁입법 일괄 상정·의결 국회는 응답하라!
 - 일시 장소 : 2024. 6. 4. (화) 오전 10시 / 국회 본청 계단
 - 주최 :전국민중행동,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
 - 순서
 - 사회 : 정용준 전국민중행동 사무처장
 - 발언
 -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 최인기 빈민해방실천연대 수석부위원장
 - 강새봄 진보대학생넷 대표
 -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
 - 장현일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의장
- *의제별 발언 추가 가능

○ 결의문 낭독

-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대표

● 구호

거부권 남발,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대통령의 특검거부 국민이 거부한다

거부된 민생개혁입법 일괄 상정·의결 국회는 응답하라

- 문의 : 전국민중행동 사무국장 심규협 010-5102-4722)

3. 귀 언론사의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결의문]

“국민의 명령이다”

거부된 민생개혁입법 일괄 상정·의결 국회는 응답하라

21대 국회는 식물 국회, 절망의 국회였다.

지난 21대 국회는 역대 어느 국회보다 일하지 않은 국회였다. 2만 7,000여건 발의중 처리한 안건은 9500여건으로 법안 통과율은 35.3%다. 1만 6000여건의 계류법안은 폐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생개혁입법안이 거부권 통치로 일관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거수기로 전략한 국민의힘으로 인해 대부분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회의 존재 이유를 거부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압도적 심판이 바로 22대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이었다. 당연히 “국민은 언제나 옳다” 던 윤석열 대통령도 이러한 민심을 받아 안는 것이 22대 국회의 시작이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윤석열의 거부권 통치를 유지하며 민생과 국정을 파탄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29일 기어이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을 포함한 4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14개 법안이 거부되었다. 얼마 전 전세사기 피해로 8번째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다. 3조원 만 있으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선구제 할 수 있고 이후 피해자들에게 후회수하면 되는데도 윤석열 정권은 돈이 없다며 외면하고 있다. 삶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선 한푼도 못 쓴다는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PF 대응을 위해선 20조원을 넘게 건설사에 퍼주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민주유공자법은 어떤가.

얼마 전, 박종철 열사의 죽음을 덮으려 한 홍승상에게 국가유공자 명패를 걸었다. 아직 박종철, 이한열 등 민주열사들은 국가로부터 온전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되어있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을 윤석열 정권은 거부했다.

22대 국회는 거부권 행사된 법안 당장 일괄상정, 일괄타결하라!

지난 총선 국민들이 만들어준 범야권 192석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21대처럼 거부권 통치로 민생을 파탄내라는 것이 아니다. 총선 전 억지로 틀어막았던 경제 위기가 눈앞의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생활물가는 폭등하고 있지만, 실질임금은 줄고 있다. 1분기 월평균 가계소득이 3.9% 폭락하며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중산층의 5가구중 1가구가 적자가구로 몰락하고 있다. 이렇게 소득이 줄자 소비를 줄이기 시작했고, 자영업자는 직격탄을 맞았다. 자영업자의 전체 대출규모가 1000조원이 넘어섰으며 연체율도 폭증하고 있다. 한편 물가를 잡는다는 이유로 정부는 농축산물 대폭 수입하면서 물가 아니라 농민만 때려잡고 있는 모양새다. 노동자 농민 서민들은 살기 위해 아우성 치는데도 정부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중단하고 민생지원금 등 민생 지원을 확대하며 사회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개혁입법 추진에 속도감을 높여야 한다.

특히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등을 인하하는 등 부자감세를 추진하면서 세수감소만 56조원을 넘어섰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 예산, 지방교부세를 줄어들수 밖에 없었다.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1가구 종부세 관련 논의도 당장 중단해야 마땅하다.

국민의 명령이다. 국회가 나서라

채상병 특검, 김건희 종합 특검 및 민생입법개혁안을 22대에서 당장, 일괄상정 일괄타결해야 한다.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개입 증거가 제시되고 있고, 부도덕한 정권의 직권남용, 직무유기가 드러나고 있다. 온 국민이 특검을 도입하라고 요구하는 이유다.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되었던 10개의 법안도 모두 민생개혁에 꼭 필요한 법안들이었다. 노동생존권을 위한 노조법 2,3조, 정권의 방송장악을 막기 위한 방송 3법, 농민생존권을 위한 양곡관리법, 해당 단위의 요구가 전적으로 반영한 법안으로 업그레이드 해서 22대 국회 일괄상정, 일괄 처리해야 한다.

새롭게 시작하는 22대 국회가 민생개혁입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거대한 항쟁의 불길이 국회로 향할 것이다.

국민이 남겨둔 8석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위한 것이 아니다.

민생개혁입법을 하라는 최후의 경고이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입법을 거부하고 몽니를 부린다면, 윤석열 정권 퇴진 항쟁이 전국에서 불길처럼 일어날 것이다.

2024년 6월 4일

전국민중행동,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